

---

# 예산 · 재정 정책연구 동향

「2023-제1호(Vol. 24호)」

---

본 자료는 2023. 2. 14.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분야 (p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I 경제동향 2023. 2월호</li> <li>•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비교 중심</li> </ul>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 경제분야 (p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재정준칙 준비하자</li> <li>•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li> </ul>	강원연구원 한국은행
3. 예산재정 관련 법령(p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li> <li>•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li> </ul>	법제처 (기획재정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4. 정책 및 연구 (p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에서 배우는 재정분권의 길</li> <li>•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li> </ul>	강원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5. 뉴스브리핑 (p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li> <li>•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li> </ul>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 6개 부처

# 1. 경제

출처

## ■ KDI 경제동향 2023.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내용요약) 바로가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나타냄

- ◎ 수출은 글로벌 경기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
  - 중국 경기 위축으로 對중국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미국 투자 부진이 반영되어 對미국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 이에 따라 제조업은 평균가동률이 급락하고 생산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부진이 심화
- ◎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회복세도 약화
  - 공공요금 인상에 주로 기인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확대, 기초적인 물가 흐름이 반영된 **근원물가<sup>1)</sup>**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지속
  - 설비투자가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의 부진으로 증가폭이 축소, 건설투자는 고금리로인한 주택경기 하락으로 부진

\*근원물가<sup>1)</sup> :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

## ■ 소득동질혼<sup>1)</sup>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국제비교 중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내용요약) 바로가기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를 주요국과 비교하고, 이것이 가구 내 소득 공유 효과를 통해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먼저 소득동질혼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간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약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고소득 남녀 간의 결혼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저소득 여성 간, 그리고 저소득·비취업 남성과 중위소득 여성 간 결혼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인하였다.

가구구조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동질혼<sup>1)</sup> : 자신과 유사한 소득수준을 갖춘 배우자와 만나 이루어지는 결혼

## ■ 강원도 재정준칙<sup>1)</sup> 도입하자

강원연구원

(내용요약) [바로가기](#)

취약한 세입구조 속에 지출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채무가 누적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작금의 재정여건 악화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이 엄격한 검증과 통제 없이 추진되어 부실화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정에는 지출팽창 특성이 내재해 있어 그냥 두면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적절한 제어수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 100개국 이상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재정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함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도 방만한 지출 관행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제정을 통해 '강원형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준칙은 그 기준이 단순하면서 명확해야 하는 바, 유럽연합(EU)과 국제재정법 개정(안)을 참고하여 수지 적자 3%를 기준으로 제안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재정혁신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별자치도의 강력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초(前哨)로서, 재정의 마지노선부터 구축해야 한다.

\*재정준칙<sup>1)</sup> : 채무, 재정적자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

## ■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한국은행

(내용요약) [바로가기](#)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에서 급격한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집행되면서 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위기에 대응 가능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경기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연구에 따르면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식별된 재정지출 충격의 성장효과가 5.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국과 OECD국가(한국 포함)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다. 또 다른 모형분석 결과, 노동공급이 적고, 고용의 질이 낮으며, 소비성향이 약화된 고령층 가계의 비중이 1%p 증가하면 정부 재정지출의 2년후 누적 재정승수가 0.78에서 0.73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노동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및 소비성향 둔화 경로를 통해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재정 · 예산 관련 법령

출처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개정 '22.12.31., 시행 '25.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3.1.1.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세부규정들도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제출 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억원으로 하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는 기타주주 소유 주식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에는 기타주주를 제외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기획재정부)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개정 '23.1.17., 시행 '23.7.1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 군경 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급여금 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며, 연체금 징수 규정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법제처  
(국가보훈처)

## 4. 정책 및 연구

출처

### ■ 스위스에서 배우는 재정분권의 길

(주요내용) [바로가기](#)

스위스는 1인당 GDP 세계 3위, 국가경쟁력 평가 1위, 국민 행복지수 4위로 물질적·정신적 번영을 동시에 구가하고 있는 나라다. 스위스의 이러한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토대가 재정분권에 근거하여 지역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도의 지방자치다. 스위스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세자주권은 각 지방이 '조세경쟁'이라는 재정정책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폭넓은 수직적 중복과세를 허용하여 지방의 과세권 보호와 세원 확보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기업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위스에는 재정정책을 둘러싼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칸톤이 재원을 지원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으로 공생과 공존을 위한 지역 간 연대를 굳건히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역에서 과세자주권을 행사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중요한 세원들이 모두 국세로 되어 있어 재원확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전받다 보니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제반여건이 너무나 척박한 실정이다. 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재원 대책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별법에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분권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비용을 치를 각오도 해야 한다. 권리와 권한을 얻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나, 대가는 작을수록 좋은 법. 스위스의 좋은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꽃피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강원연구원

### ■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핵심요지) [바로가기](#)

중산층 축소에 관한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 흐름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의 비중과 상대적 경제력은 최근 10~20년간 유지 내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어, 당장의 소득분배 개선보다 동태적인 계층이동 가능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실용적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개발연구원

# 5. 뉴스브리핑

출처

## ■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

(주요내용)  **바로가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0일(금) 오전 9:3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유희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 정부는 이번 일반·특별회계 총세입·총세출부 마감 결과 및 2월말 기금 결산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4.10.)하여 감사원 결산 검사 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총세입) 573.9조원, (총세출) 559.7조원,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2조원이며, 이월액 5.1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일반회계 6, 특별회계 3.1)

< 2022회계연도 마감 결과 >

(단위 : 조원)

구분	예산 (추경기준)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잉여금 (C=A-B)	이월 (D)	세계잉여금 (E=C-D)	
합계	2022(a)	573.5	573.9	559.7	14.2	5.1	9.1
	2021(b)	506.7	524.2	496.9	27.3	4.0	23.3
	(a-b)	66.8	49.8	62.8	△13.1	1.1	△14.2
일반회계	2022(a)	495.2	493.9	485.0	8.8	2.8	6.0
	2021(b)	424.4	438.4	417.7	20.6	2.6	18.0
	(a-b)	70.8	55.5	67.3	△11.8	0.2	△12.0
특별회계	2022(a)	78.3	80.1	74.7	5.4	2.3	3.1
	2021(b)	82.3	85.8	79.1	6.7	1.3	5.3
	(a-b)	△4.0	△5.7	△4.4	△1.3	1.0	△2.2

## ■ 살기좋은 지방시대,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활력타운<sup>1)</sup> 공모

국토교통부  
외 6개 부처

(주요내용)  **바로가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사업부는 각 부처간 협약에 따라 2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 추진

- (국토교통부) 공모절차 운영, 주거공급과 기반시설 지원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협력사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국민체육센터 건립/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지원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어촌 경제·생활 인프라/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 (광역지자체) 단지조성 인허가 지원,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구성

\*지역활력타운<sup>1)</sup> :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지원되는 주거단지 조성하는 사업